

#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 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4. 3. .

발 의 자 : 원주영, 김지훈(국), 이수련,  
박은경, 김지훈(민), 이경숙,  
전혜연, 김동훈, 손정자,  
한근수, 이상기, 김영실,  
정현미, 이진환

### 1. 제안 이유

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아동·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과 범죄 피해,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안심귀가 환경조성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취약지역의 선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주요 사업 내용과 지역별 실태 조사, 안전시설물 점검(안 제5조~제7조)
- 라.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,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 5. 관련 법령 :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##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,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심귀가”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안심귀가도우미”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안심조명시설”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.
4. “안전시설물”이란 방범용 CCTV, 안심조명시설, 보안등, 비상벨,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·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 및 안전

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취약지역의 선정)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.

1. 사건 ·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  2. 재개발 ·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
  3.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
  4. 아동 ·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
  5.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심귀가도우미 운영
  2. 안전시설물 설치
  3.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

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제7조(안전시설물 점검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련부서의 협조)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사업추진)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제1호 : 안심귀가도우미 운영
  - 제2호 : 안전시설물 설치
  - 제3호 :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- 제4호 :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제5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에 따른 수당,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,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등 관련된 예산 수반 사항을 추계할 수 없기에 이를 미첨부함

### 4. 작성자

- 시민안전관 이명구

## 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 ☑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